

미세먼지에 갇힌 광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는 등 그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7일 광주 남구 사직타워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도심(왼쪽)이 뿌옇다. 지난 7월 청명한 날씨에서 바라본 같은 도심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예타 면제 사업 '호남 소외' 반영해야

광주·전남 인구수 적어 불이익 ... 현안 대부분 '발목' 잡혀
과거 정부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도 호남은 전국 최하위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앞두고 그동안 예타 때문에 발목이 잡혔던 호남의 주요 사업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는 인구수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호남은 그동안 영남 등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예타 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 영남에 집중된 반면, 호남

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 선정 과정에 충분히 '호남의 소외와 불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전선 예타 면제 포함' 발언과 관련, 일각에서는 "이미 내년 국비 예산이 반영된 경전선이 예타 면제에 포함되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청한 다른 사업이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께 당정협의를 사·도지사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각 사·도별로 추천한 예타 면제 사업을 검토해 국가균형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는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허브를 만드는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1조원)과, 허브기반을 중심으로 전국 전문기관과 연계해 광융합 기술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광융합산업 핵심 기술 구축'(8000억원) 등 2건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전남도는 해안관광도로 사업의 전남지역 구간인 신안-압해-해남 화원 간 연도교(4828억원),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9008억원), 여수 화태-백야 간 연도교(5277억원)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요청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예산 규모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들로, 광주·전남의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다. 이때문에 이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수적이다. 흔히 대형 투자사업은 '예타조사→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예타는 투자된 예산 대비, 거둬들일 수 있는 효과 등을 따지기 때문에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인구 수가 적은 호남은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실제, 내년 국비 예산에 철도기본계획 수립 10억원이 반영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의 경우, 수 차례 예타에 발목을 잡혀 88년만에 철도 현대화의 첫발을 땔 수 있게 됐다. 또 대형 사업 추진 과정에 예타를 면제해주는 비율에서도 호남지역은 과거 차별을 받아왔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 구분이 가능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69건 가운데 40.6%(28건)가 영남지역에서 진행됐고 호남은 8건으로 11.6%에 불과했다.

경전선의 예타 면제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이미 국비 지원이 이뤄져 사실상 예타 면제가 이뤄진 사업인데,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 전남도 등이 신청한 다른 사업들이 선택되지 않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저임금·노동시간 정책 바뀌나 문대통령 "국민 공감 속 추진해야"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이며, 문 대통령이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보완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 경제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 임기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초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논란·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닦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 부문 움직임도 시작됐으며 공정경제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이런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자영업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 산업 측면에서 자동차·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택시 기본요금 내년 1월부터 3300원

시, 요금 인상안 심의 확정
운전원 혜택 돌아가게 권고

광주도시철도 김대중센터역에서 돌고개역(직선거리 5km, 기본·거리요금 적용)을 오가는 택시 요금이 현재 48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 될 전망이다.

광주지역 택시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된다. 또, 광주시는 이 인상분이 운전원 임금 인상과 차우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광주시는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가 상정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2km)을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고, 거리·시간 요금은 각각 145m·35초당 100원에서 134m·32초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 3200원에서 3900원, 그리고 172m·41초당 100원에서 156m·36초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앞서 택시조합은 지난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600원, 모범·대형택시는 32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금 조정 건의서를 냈다. 이에 광주시는 시의회, 시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 인상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인상안을 보고하고 내년께 이 인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 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1998년 1300원, 2002년 1500원, 2005년 1800원, 2008년 2200원, 2013년 2800원으로 올랐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에 이용객은 감소했으나 그동안 요금이 동결돼 택시업계 경영난이 가중됐다"며 "요금 인상에 따라 운전원들의 임금 인상과 차우개선을 경영자 측과 사전 논의했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도 전달한 뒤 지도·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정찬주의 유럽 예술기행
-헝가리 부다페스트 ▶18면
체육기자가 뽑은 '2018 스포츠 10대 뉴스'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1위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상생의 차이는 없습니다
”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와 전남 상생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생각의 차이는 큼니다. 그 차이 속에서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각자의 미래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 **주민지원사업 : 4,500억원 + 국고보조금 등**
 - 태양광발전 단지 등 수익형 사업추진(연 90억원)
 - 기타 : 국고보조사업 국비 추가 지원
- **소음대책 수립**
 - 이주단지 및 주거환경 조성
 - 소음완충지역 110만평 조성
- **경제적 효과('16.11.20.국방부)**
 - 생산유발효과 : 5조 1,215억원
 - 부가가치 : 1조 8,010억원
 - 취업유발 : 3만 8,479명

※ 기타 : - 부대 소요물자 현지조달 및 민회객 연 11천명 등
- 지역업체 계약우선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